

[청 구 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0. 30.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로 ○○호 소재 ‘○○’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4. 4. 3.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생닭을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4. 8. 8.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 8. 25. ○○검찰청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고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4. 10. 30.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84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3년 2월부터 ‘○○’로부터 염지닭을 납품받아 가공 사용하였으나 유통기한 표시가 10개 포장된 큰 포장지에는 표기되어 있었으나 날개 하나하나에 표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으며,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시작한 생계형 가게인데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여성가장으로서 과징금 84만원의 처분은 가혹한 처분으로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4. 4. 3.경부터 4. 25.경까지 총 87마리의 생닭을 납품받을 당시 10개들이 큰 포장지에서 유통기한 표기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유통업체인 ○○의 작업 현장에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사실과 일부 업체에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추적하여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 대표자 또한 유통기한을 위 기간 동안 표기하지 아니하고 유통하였다고 진술한 바 청구인이 납품받은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검찰에도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날개 포장되어 있는 생닭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도 인정한 바,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표시 제품을 청구인의 관리 소홀로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청구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인 점과 어려운 가게형편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행정처분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식품접객업 영업에 사용하는 원재료인 생닭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3. 2. 12.부터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4. 3.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생닭 87마리를 유통업체인 ○○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4. 5. 1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 하였다.
- 2) 위 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4. 8. 8. 식품위생법 제10조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 8. 25. ○○검찰청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고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4. 10. 30.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84만원) 처분을 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의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정 취지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생닭을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다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바 식품위생법 위반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은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해당 제품은 조리·판매에 가장 중요한 원재료로 적발대상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